

“언제 일일이 다하나”
수검표 30년만에 재도입

“언제나 끝났나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오후 광주 북구지역 개표소가 마련된 복구종합체육관.
개표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는 어색했던 개표사무원들의 손길이 점차 능숙해지는 듯 보였다.
사무원들은 저마다 손가락에 사무용 글루를 착용한 채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넓기며 신중히 분류 작업을 펼쳤다.
1995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수검표 절차를 없앤지 30년, 수검표를 하던 한 개표사무원들은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를 듣고 있던 한 사무원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손도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받아쳤다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다.
앞서 개표가 시작되기 전 개표소 인근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정확도라 99.9%라고 하는데 꼭 수검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벽 2~3시면 끝났던 총선 개표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공무원은 “원래 민원이 잦은 투표사무원보다 개표사무원을 더 선호했다”며 “이번에 수검표로 바뀌고 난 뒤에는 차라리 투표사무원이 더 낫다는 동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만은 개표에 동원된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다. 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경찰과 소방 등 다른 공무원들도 늦어지는 개표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광주·전남 3선 이상 대선 도전자들 ‘희비 교차’

‘6선 도전’ 3지대 이낙연·송영길, ‘4선 사냥’ 국힘 이정현 좌절
‘정치 9단’ 박지원 5선, 이개호 4선, 서삼석·신정훈 3선 고지

군공항·의대설립·5·18보고서… 광주전남 당선인들 과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민주당 싹쓸이
지역 발전 굵직한 현안 사업 해결 기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지역민들은 광주 8명, 전남 10명의 당선인들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의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은 5조 7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지난 2018년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이후 올해까지 6년째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간공항을 2025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한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됐지만 군공항 이전문제가 해결 안돼 제자리 걸음이다.
5·18민중화운동 44년만의 국가 첫 보고서의 의미가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는 6월 26일 국회·정부 채택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발표명

령자·행방불명자 등을 규명 불가능 결정해 또다른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미래를 책임질 핵심과제로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실증단지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광주선 지하화·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영산강·황룡강 100리길 조성’ 등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은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 방침으로 세워졌지만 유지대학을 놓고 순천과 목포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차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설립을 어느 대학에 할

지 정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30년 묵은 현안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김영록 지사도 “전남 의대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아우르는 ‘통합 국립 의대’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모 방식으로 단일 의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순천과 목포지역이 갈등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원을 약속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조기 건설’에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영암아우토반은 국내에는 도입된 적이 없는 신개념 고속도로망으로 2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개통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 목포·무안트램, 관광객 증가 등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농축산업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 육성,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을 현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 한 유권자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2대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처럼 특정 상임위 몰리지 않고 국토위·산지위·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당선인 대부분이 초선인어서 지역 현안이 제대로 당과 국회·정부에 전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국회와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시·도지사들의 정치력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김도기 기자

조국 “국민이 승리했다” 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대표상황실에서 최대 14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지상과 3차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 망가졌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창당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또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들을 틈틈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당 대표상황실에는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광역 부단체장 출신들 ‘광주 고전-전남 선전’

광주 4명 중 1명만 당선
전남은 2명 모두 승리

석 전 경제부시장은 나란히 현역 신분으로 동남을, 북구 읍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전남에서는 직전 문경주 행정부지사가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 당내 경선에서 3선에 도전한 도당위원장 출신 ‘586’ 김승남 의원을 제치며 더 이상에서 90%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선에 성공했다.
행정부지사 대선배 격인 이개호 의원도 담양·함평·영광·장흥 선거구에서 다다호수로 분류된 ‘3선 군수’ 출신 무소속 이석형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누르고 4선 고지에 올랐다.
1급 관리관인 광역 부시장·부지사의 역대 총선 성적표도 희비가 뚜렷했다. 광주 12명, 전남 8명이 ‘여의도 배지’에 도전했으나 병훈 전 문화경제부시장과 이형

배를 땀했다. 무소속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에서 ‘3선 타이틀’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압승 분위기를 넘어서진 못했다.
반면 당선된 다선 의원들의 썩프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5선 도전에 나선 팔순의 박지원 전 국경원장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5선 고지에 올라섰다.
‘정치 9단’ ‘D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전 원장은 이로써 제14, 18, 19, 20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박 전 원장의 국회 입성으로 원내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관료 출신 이개호 의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수공천을 둘러싼 진풍 끝에 담양·함평·영광·장흥 선거구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와의 예측불허 격돌로 생판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막판 지지층이 결집하며 넉넉한 표차로 승리했다. 4선에 성공하면 국회 부의장과 당지도부 내 중책을 맡을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고려대 학생운동을 이끈 ‘586’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나란히 결선투표 끝에 본선에 올라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3선에 성공했다.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고, 당내 지도부 변화에 따라 중앙당 지도부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기·김호 기자

광주지역 당선인 초선 87.5% 달해

초선의원 많아 한계 노출…다선 7명 중량감 기대

제22대 총선 결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초선 비율이 87.5%(7명)에 달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13명에 달했던 광주·전남 초선의원들이 호남 정권 출범에 힘입어 광주·전남 정치력 부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련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를 휩쓸었다.
18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중 다선은 7명(38.9%)으로, 5선 1명, 4선 1명, 3선 2명, 재선 3명이었으며 초선은 11명(61.1%)으로 재편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광주·전남 초선의원 비율(13명·72.2%)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초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광산을 민행배 당선인(재선)을 제외한 7명(87.5%)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동남권 정진욱, 동남을 안도걸, 서구권 조인철, 서구를 양부남, 북구권 정준호, 북구를 전진숙, 광안권 박준택 당선인이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8개 선거구 가운데 7명이 초선이었으며 그 중 6명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교체됐다.
대부분 초선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한계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론, 여야 강대강 대치… 광주·전남 무소속 ‘0’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평가 놓고 여야 지지층 총력 결집
거대양당 대결 속 설 자리 잃어…무소속 출마자 역대 최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광주·전남에서 무소속 돌풍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후 10시 40분까지 개표한 결과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력시된다.
지역 내 무소속 후보 8명 중 5명(광주 1명·전남 4명)이 현재 득표율 2위를 달리고 있지만, 1위 민주당 후보와의 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광주에서는 동남을 민주당 내 경선 컷오프에 탈락한 구청장 출신 김성환 후보가 무소속 출마했지만, 개표가 34%이 진행된 상황에서 득표율 71.81%인 민주당 안도걸 후보에게 55.4% 포인트(P) 차로 크게 밀리고 있다.
광주 내 북구갑·광안갑에서도 각기 무소속 후보가 도전했지만 득표율은 한자릿수로 ‘미풍’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 무소속 후보 출마 선

거구 5곳 중 4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현 개표 상황에서 2위로 선전하고 있지만, 당선권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지체장이거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당내 단수공천 또는 경선 컷오프에 탈락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담양·함평·영광·장흥, 권오봉 후보(여수), 이윤석 후보(목포) 등 3명 모두 민주당의 아성을 깨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선 백재욱 후보(영암·무안·신안)도 민주당 현역 서삼석 의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신성식 후보도 3위권 다름을 하며 당선권에서 멀다.
이로써 사실상 광주·전남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강한 지역 특성상, ‘인물론’을 앞세운 무소속 후보가 종종 돌풍 주역으로 당선